

연금 시장 리뷰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국내 양극화 현상의 실체

퇴직연금

- 동향 : 2011년 노인실태조사 요약
- 이슈 : 고령자 고용 실태와 정책적 보완과제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4월말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시대 개막

-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0-2060”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12년 6월 23일 5천만명 넘어서고 5천만명 시대는 33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생산가능인구 감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40년 80.2로 줄어들어 독일,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임
 - **고령화:** 향후 30년간 약 700만명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것임
- 다만, 출산률(2010년, 1.23)을 제고할 경우 고령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 동향: 유로존 위기 하락에도 미국 경기 등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은 혼조

-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보수당이 승리하고 연정 구성에 성공함에 따라 유로존에 대한 위기감은 완화되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재대두되어 글로벌과 국내 금융시장 모두 혼조세를 보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6월 12일 3.32%에서 6월 22일 현재 3.31%로 소폭 하락
 - 원/달러 환율은 6월 12일 1,170.5원에서 6월 22일 현재 1,581.5원으로 41.1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조와 국내 증시의 MSCI 지수 편입 불발 등으로 6월 12일 1,854.7에서 6월 22일 1,847.4로 7.3p 하락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6월12일	6월22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6.2	3.6	4.2	3.4	3.4	3.4	2.8	-	
	산업생산(%)	16.2	7.0	10.6	7.2	5.3	5.3	4.2	0.0	-
	소비자물가(%)	2.9	4.0	4.5	4.2	4.8	4.2	3.0	2.5	2.5
	실업률(%)	3.7	3.4	4.2	3.4	3.1	3.0	3.8	3.5	3.1
	경상수지(억달러)	282.1	276.5	26.1	54.9	69.0	126.7	26.3	17.8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72	3.62	3.80	3.68	3.60	3.41	3.47	3.32	3.31
	원/달러(원)	1,156.0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40.5	1,170.5	1,158.5
	코스피지수(P)	2,051.0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1,972.6	1,854.7	1,847.4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012년 1/4분기 GDP성장률은 전망치며, 6월12일은 4월, 6월 22일자는 5월 수치임.

□ 경제 이슈: 국내 양극화 현상의 실체

- 양극화 점차 개선 조짐이 보인다!

■ 양극화의 개념과 영향

양극화란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 점차 축소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다.

■ 부문별 국내 양극화 실태

국내 양극화 실태를 가계소득 및 불평등도, 가계소비, 고용 및 일자리, 임금, 기업 성장 및 수익률의 5가지 부문으로 살펴본 결과 **국내 양극화 현상은 주거부문 격차 확대와 같이 심화되고 있는 부문도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완화되고 있다.** 첫째, **가계 소득 및 불평등도의 경우, 최근 중산층 비중이 상승하고, 경제적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하락하고 있다.** 중산층 비중은 2008년 66.3%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 2011년에는 67.7%까지 회복되었다. 지니계수도 2009년 0.295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에는 0.289로 다소 하락하였다. 둘째, **가계 소비 중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는 소득 5분위와 1분위 계층간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다만,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중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소득 5분위와 1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 격차는 1990년대 1.1%p에서 2000년대 이후 1.0%p로 미약하나마 축소되었고, 교육비 지출 비중도 최근 하락하고 있다. 반면, 소득 5분위와 1분위계층의 거주비 지출 비중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셋째, **고용 및 일자리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실업률 차이가 축소되고 있고,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1998년 12.2%까지 상승한 후 2011년에는 6.9%까지 하락하였고, 청년층과 장년층의 실업률 차이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작게는 1.6%p에서 크게는 2.7%p까지 축소되었다. 한편,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이 2011년 61.3%까지 상승하면서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대폭 하락하였다. 넷째, **임금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물론 제조업과 비제조업 임금 격차도 최근 축소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10년 103.6만원까지 확대되었으나, 2011년 102.6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또,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임금 격차도 2003년 22.9만원에서 2011년 12.6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다섯째, 기업 성장 및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양극화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총자산 및 매출 증감률 차이는 1990년대 대비 2000년대에 축소되었으며,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또,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는 대·중소기업이 1990년대 평균 2.9%p에서 2000년 이후 2.5%p로, 수출·내수기업은 1990년대 1.8%p에서 2000년 이후 0.3%p로 축소되었다.

■ 시사점

국내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다 최근에는 완화 또는 정체되고 있는 상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선,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일하는 복지'를 위한 투자 확충, 주거나 보육과 같은 취업인프라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양극화 문제도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부문의 혁신 가속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의 실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소는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의 자원이전에 의한 제로섬 분배가 아닌 성장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협력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연구위원(02-2072-6306, leebuh@hri.co.kr),
정민 선임연구원(02-2072-6220, chungm@hri.co.kr)

□ 동향: 2011년 노인실태조사 요약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약)

○ 노인실태조사 결과

① 노인가구 형태 및 가치관

- (가구유형) 노인독거 19.6%, 노인부부 48.5%, 자녀동거 27.3%로, 노인단독가구(노인부부, 노인독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자녀동거율이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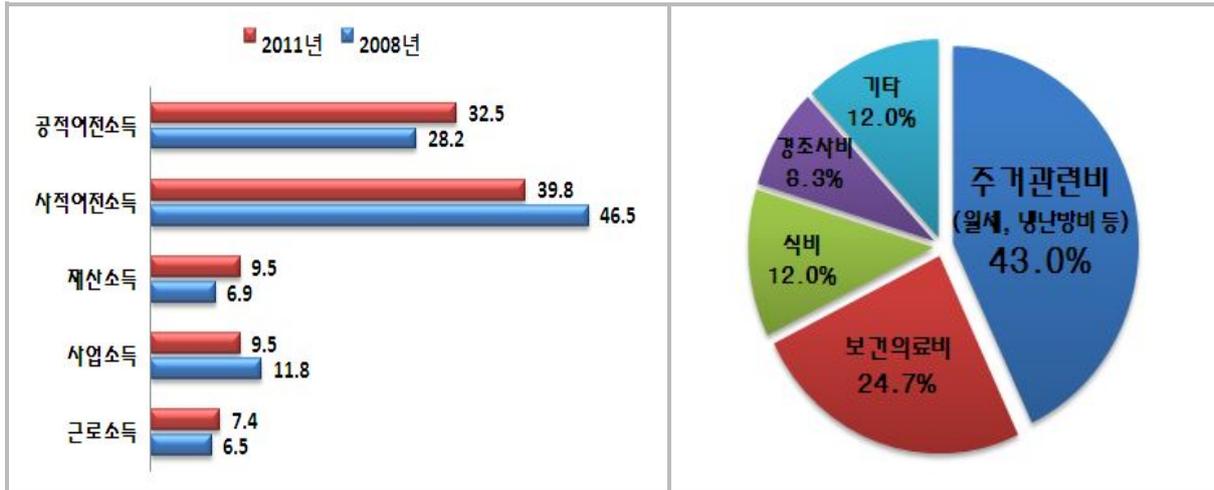
- (노인연령) 조사대상자의 83.7%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이상"으로 생각, 1994년(30.1%), 2004년(55.8%)에 비해 급증한 수치로 통상적으로 정의되는 65세는 더 이상 노인의 연령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②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실태

- (소득) 개인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이 39.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08년 대비 사적이전소득은 감소(46.5→39.8%)하고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은 증가(28.2→32.5%)함

· 가구소득은 독거가구가 연 841만원, 노인부부가구 1,798만원, 자녀동거가구 3,763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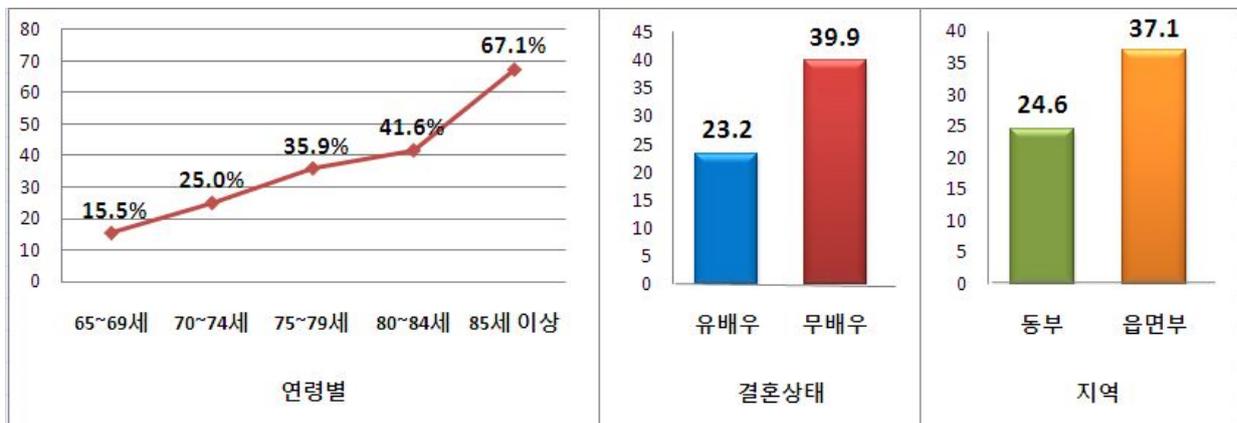
- (지출) 조사대상의 43.0%가 소비지출 중 주거관련비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보건의료비 24.7%, 식비 12.0%순임



- (경제활동) 노인의 취업률은 34.0%로 이전 조사결과*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고, 농·어·축산업 (52.9%)과 단순노무직 비율(26.1%)이 79.0%로 높음
* 1994년 28.5% → 1998년 29.0% → 2004년 30.8% → 2008년 30.0%
- 일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79.4%)이, 미취업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32.8%)가 가장 많음

③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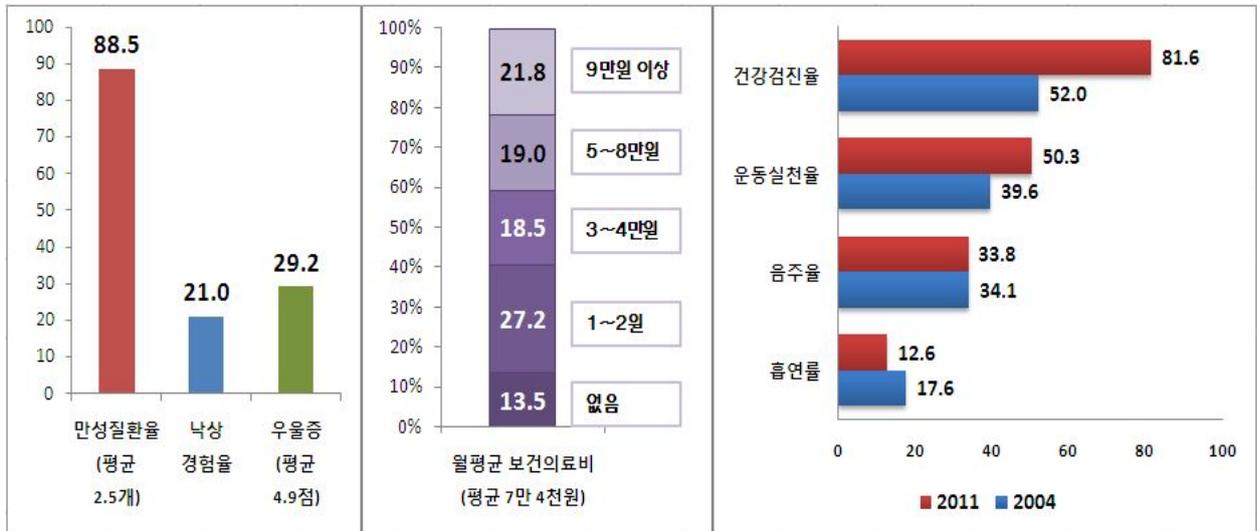
- (만성질환)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여성 93.7%, 남성 81.8%), 남녀 모두 고혈압이 가장 높은 유병률(54.8%)을 보이고 있음
* 고혈압 54.8%, 관절염 40.4%, 당뇨병 20.5%, 요통·좌골통 19.9% 순
- (낙상) 노인의 21.0%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 이 중 72.4%가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낙상경험 장소는 실외(도로, 공원 등)가 56.0%로 가장 많음
- (인지기능) 응답자의 28.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으며,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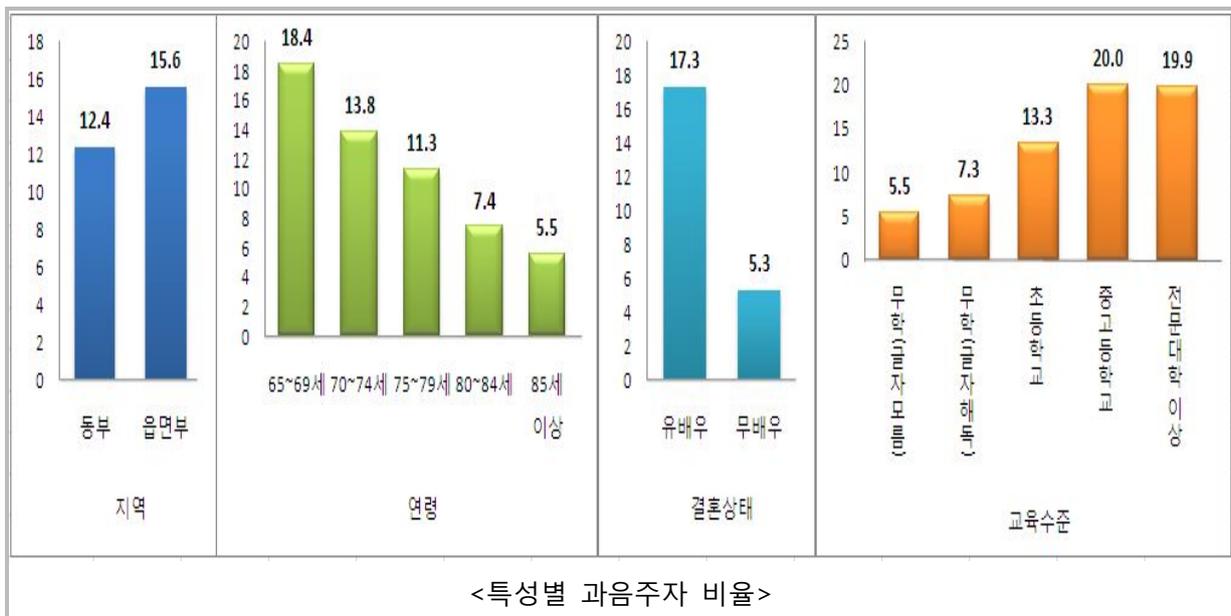
- (건강행태) 흡연율은 12.6%, 연간음주율은 33.8%, 운동실천율은 50.3%이며,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81.6%

* 19세이상의 흡연율은 26.9%, 연간음주율은 77.7%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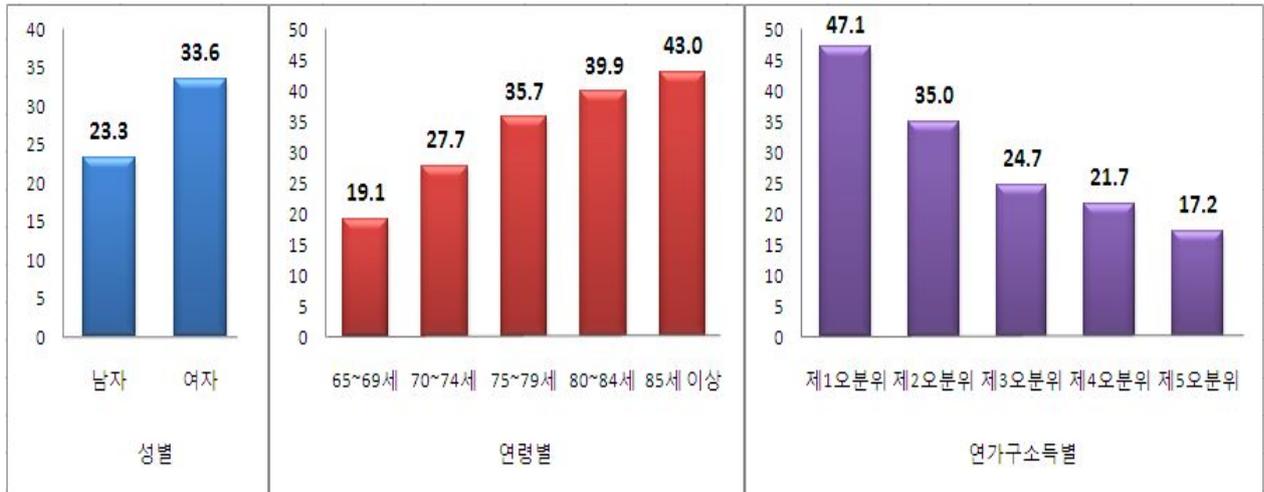
- 2004년에 비해 흡연율(17.6%)은 감소하였으나 음주율(34.1%)은 큰 변화가 없고, 운동실천율(39.6%)과 건강검진율(52.0%)은 월등히 증가



- 1주일에 7잔을 초과하는 과음주자 비율은 13.4%로 읍면지역, 저연령, 고학력, 유배우자에서 높게 나타났음



- (우울) 노인의 29.2%가 우울증상(8점이상)을 보이며, 여성, 고연령, 저소득일수록 우울증상률이 높게 나타났음



④ 여가 및 사회활동

- (여가) 노인의 대부분(99.0%)이 TV를 시청하고 있으며(평균 3.8시간), 이외의 여가활동에는 화투·카드(26.9%)가 가장 많고, 등산, 화초가꾸기, 책읽기, 노래교실, 바둑·장기·체스, 산책 순으로 나타났음
- 전체 응답자의 34.2%가 친목도모를 위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8.8%에 불과한데, 31.0%의 노인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라고 응답하였음
-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3.9%로 매우 낮고, 자원봉사활동에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6.9%나 됨
- 종교기관을 통한 참여(30.7%)가 가장 많고, 사회복지분야(장애인, 아동 노인봉사 등, 49.6%)와 환경보호분야(21.9%)에 주로 참여
- * 미국의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65~74세 노인의 41.4%, 75세 이상 노인의 39%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

⑤ 노인의 생활환경

- (안전사고) 전체의 4.9%가 안전사고(집안내 화재, 가스누출 등)를 경험, 노인독거가구의 경험율(6.5%)이 자녀동거가구(3.8%)보다 높게 나타났음
- (노인학대) 전체노인의 12.7%가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경험률이 높음
- 학대에 대한 대응태도는 40.7%가 신고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참는다는 응답도 36.3%로 높게 나타났음

- (자살) 노인 중 11.2%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만 60세이후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1.2%임
-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건강 32.7%, 경제적 어려움 30.9%,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이 15.3%, 외로움 10.3% 등임

□ 이슈: 고령자 고용 실태와 정책적 보완과제

고령화의 가속화와 712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100세 시대 도래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고용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화를 이끌었던 고령자들의 숙련 기술력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이 향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부터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복지패널 자료를 기본으로 현 준고령자이상의 고령자 고용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자리 양 측면에서는 고령자 고용이 점차 추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자리 질, 특히 중사상 지위측면에서는 상용 근로자가 감소하는 대신 일용직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었다. 또한 근무환경을 나타내는 일의 연속성과 유해 근무환경에서도 고령자들은 젊은 층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년 초 향후 5년간 고령자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2차 고령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일자리 양에 있어서 단축시간 근무 청구제도 도입 등 '세대간 일자리 함께 나누기'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늘어나는 고령자 일자리로 인해 청년간 일자리 경쟁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자리 질에서는 대기업의 전직교육 의무화 등 전직시스템의 재정비와 사무직 직장알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사무직의 직장 알선은 생산직과 달리 삼각형 형태의 조직구조에 몸담고 있는 사무직들이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정책으로 보인다. 셋째, 인프라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활성화와 모집·채용 상의 연령차별 예외 인정, 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 및 연령기준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중에서 퇴직연금 활성화와 보험자격 이중 취득 허용은 고령자들이 은퇴와 실직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최소한 유지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면도 존재한다. 첫째는 고용연장과 관련된 60세 정년무화 문제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리고 어떠한 법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일용직 고용에 대한 대처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 노조형성 기업에 취직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한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는 유해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고령자들의 재해율이 높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예방적인 방안 외에 산재보험 가입 촉진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

1. 문제제기

-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고령화 현상임**
 -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보다 6년이나 빠르고, 전체 인구의 14.6%인 베이비붐 세대(1955년~63년생) 712만 명이 2010년부터 기업정년 연령 55세로 인해 은퇴하기 때문
 -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현 80세인 평균 수명이 2030년에 90세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됨
- **고령화 현상이 국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숙련 노동력 부족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
 - 비록 고령인력이 은퇴한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높은 청년들의 경우 사무직이나 전문직 일자리를 청선호해 대체효과는 미비 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부족 인력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고려되지만 짧은 체류 기간과 기술습득 후 본국으로의 귀국, 그리고 전수과정 상의 언어소통 문제로 인해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대부분의 고령가구들이 가족 부양비와 자녀 교육비 등의 과다한 지출로 인해 은퇴자금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노인부양비가 2010년 15%에서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2007년부터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작성, 지속적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사업을 벌여오고 있으며, 금년에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함**
 - 본고에서는 우선 실 가구주 중심의 일자리 양과 질, 업무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현 고령자들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 이후, 금년 1월에 발표된 정부의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향후 정부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점검하고 보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고령자 고용 실태

- (고령자 범위) 고령자 기준이 다양하게 존재함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업정년 연령과 연령수급 연령, 사회적 통용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준고령자 (55~64세)와 65세 이상 고령자로 분류

- 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준고령자를 50~5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고령자를 의미하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0세로 규정
- 한편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사업에서는 65세 이상자를 고령자를 의미하는 노인으로 규정

- (일자리 양)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고려 시 고령자의 고용은 점차 증가 추세

- 05년 대비 09년, 55~64세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p, 고용률은 8.77%p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7.33%p 감소함
- 65세 이상 가구주에서도 동기 대비 고용률(2.35%p)은 증가한 반면, 실업률(0.66%p) 감소함
- 연평균 증감률에서도 55~64세 준고령자들은 경제활동 참가율(1.4%)과 고용률(3.4%)은 증가한 반면 실업률(30.7%)은 감소했고, 65세 이상도 고용률(1.9%)은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30.3% 감소함

〈표 1〉 가구주의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단위: %, %p)

구분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2005	79.15	95.84	94.98	68.48	33.50
	2006	78.03	95.23	95.14	68.73	33.90
	2007	76.78	95.06	94.73	69.93	35.15
	2008	78.97	93.68	93.24	69.17	35.78
	2009	78.67	94.85	92.89	72.31	33.83
	격차(05vs.09)	-0.48	-0.99	-0.29	3.83	0.33
	연평균 증감률	-0.2	-0.3	-0.6	1.4	0.2
고용률	2005	75.59	93.56	91.78	61.96	30.83
	2006	74.64	92.08	91.66	64.57	31.23
	2007	73.99	92.51	92.04	65.15	33.33
	2008	76.52	91.22	90.25	66.76	34.79
	2009	77.71	93.99	92.00	70.73	33.18
	격차(05vs.09)	2.12	0.43	0.22	8.77	2.35
	연평균 증감률	0.7	0.1	0.1	3.4	1.9

실업률	2005	4.49	2.38	3.37	9.52	7.98
	2006	4.35	3.31	3.66	6.05	7.87
	2007	3.64	2.68	2.84	6.84	5.18
	2008	3.10	1.57	3.21	3.48	2.75
	2009	1.21	0.91	0.96	2.19	1.92
	격차(05vs.09)	-3.28	-1.47	-2.41	-7.33	-6.06
	연평균 증감률	-27.9	-21.4	-26.9	-30.7	-3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 2005~2009.

주: 연평균증감률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연평균증감률

- (일자리 질) 고령자 외 전반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높아지면서 종사상 지위가 악화되는 경향임

- 55~64세 준고령자의 상용 임금근로자 비중은 07년 33.09%였으나 09년 27.54%로 5.55%p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가구주의 상용 임금근로자 비중도 07년 13.59%에서 09년 3.18%로 10.41%p 급감함
 - 반면에 임시근로자 비중은 동기간 54~64세 준고령자는 7.01%p, 65세 이상은 10.51%p로 급증
 - 한편, 임시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율은 고령자와 더불어 전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동반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비정규직 양성에 고령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
- ⇒ 07년부터 09년까지 2년간 임시 임금근로자 비중은 15~29세 가구주의 경우, 4.48%p, 30~54세 가구주는 5.86%p, 55~64세는 7.01%p, 65세 이상 고령자는 10.41%로 높아짐

<표 2>가구주 연령별 종사상 지위 비중

(단위: %, %p)

연령	연도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15~29세	2007	75.70	17.57	2.51	-	0.94	3.27	-	100.00
	2009	71.70	22.05	3.31	-	0.00	2.94	-	100.00
	격차(07vs.09)	-4.00	4.48	0.80	-	-0.94	-0.33	-	-

30~54세	2007	61.08	6.27	9.21	0.64	7.22	15.10	0.48	100.00
	2009	54.72	12.13	8.54	0.64	6.16	17.53	0.27	100.00
	격차(07vs.09)	-6.36	5.86	-0.67	-	-1.06	2.43	-0.21	-
55~64세	2007	33.09	7.79	16.97	0.94	3.95	36.38	0.89	100.00
	2009	27.54	14.80	15.65	0.96	4.56	35.60	0.89	100.00
	격차(07vs.09)	-5.55	7.01	-1.32	0.02	0.61	-0.78	-	-
65세 이상	2007	13.59	6.85	16.63	0.45	1.56	58.99	1.93	100.00
	2009	3.18	17.36	12.64	3.20	1.61	60.15	1.85	100.00
	격차(07vs.09)	-10.41	10.51	-3.99	2.75	0.05	1.16	-0.08	-
전체	2007	53.03	7.16	10.68	0.62	5.83	22.02	0.66	100.00
	2009	47.75	13.60	9.56	0.85	5.16	22.61	0.47	100.00
	격차(07vs.09)	-5.28	6.44	-1.12	0.23	-0.67	0.59	-0.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 2005~2009.

- (업무환경) 일의 불규칙성에서 젊은 층보다 매우 높고, 유해환경 노출비중도 점차 증가 추세

- 일의 불규칙성에 있어 54세 이하는 약 10%대를 유지하는 반면, 55~64세 준고령자는 매년 약 30% 정도이고, 65세 이상은 2배가량 더 높은 60%대를 유지
- 유해환경 근무 비중에서도 54세 이하는 10%대 유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55~64세 준고령자들은 05년부터 08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증가폭이 타 연령대보다 크며, 이는 은퇴 후 새로 구한 고령자 일자리가 단순 업무인 경우가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

〈표 3〉 가구주 연령별 일의 불규칙성과 유해환경 근로비율

(단위: %)

구분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일의 불규칙성	2007	19.16	2.54	11.60	32.94	60.13
	2008	15.96	5.28	9.75	26.61	60.70
	2009	18.24	1.77	12.74	29.57	60.08

유해환경 근로비율	2005	14.16	10.54	15.26	14.38	6.85
	2006	15.25	11.13	16.01	17.71	9.62
	2007	17.37	8.87	17.73	21.33	14.63
	2008	16.34	9.78	17.08	19.42	10.87
	2009	13.86	7.22	14.84	14.51	10.18

자료: 한국복지패널 3~5차년도 원자료

3. 정부의 고령자 고용정책

- **(정부 정책) 정부는 12년 1월, 6대 전략을 포함,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12~'16)을 발표**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고령자 일자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를 위한 6대 과제를 선정·발표함
 - 6대 전략에는 '세대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강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지원 확대', '퇴직준비·능력개발 지원강화', '조기 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공헌 일자리 등 사회 기여와 재능 나눔 지원 활성화', '고령사회 대비 제도·인프라 정비'가 포함됨
- **(일자리 양) 일반 일자리보다 청년과 고령자가 공생발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 또한 사회적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고령자의 경험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것도 금번 기본계획의 특징임
 - 특히 '산업현장 교수'와 같은 지식과 경험지향의 멘토형 일자리와 '시간제 근로전환 청구제도'를 도입, 심각한 청년실업과 고령자들의 제 2직업 훈련을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을 구축

<표 4> '세대간-사회공헌용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세부내용

과제 방향	세부 과제	추진 사업
1. 세대간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강화	- 숙련경험·기술 전수 활성화	- 숙련 준고령 근로자들을 청년 신규직원의 멘토·강사로 활용 - 명장 등 기술 전문가 Pool을 구축, 산업현장 교수로 활용
	- 세대간 상생형 일자리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도입 시,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 및 50세 이상 근로자 시간제 근로전환 청구제도 도입 - 고령자 경험·재정과 청년 층 아이디어를 결합한 세대 융합형 아이디어 창업지원
	- 사회적 여건 조성 및 노사협력강화	- 2050 함께 일하기 캠페인 전개 - 노사가 임금 단체·협약 체결시 세대간 일자리 상생 가능방안 모색 - 노사정위에 '세대간 상생위원회' 설치
2. 사회 기여 및 재 능 나눔지원 활성화	-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은퇴전문 인력의 지식 등을 사회적 기업에게 기부하는 일자리창출 - 전문 퇴직인력을 초중고의 직업체험의 날 1일 강사로 활용
	-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	- 은퇴 전문 인력을 사회적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인력화 - 퇴직 전문 인력 중 사회공헌 활동 참여자를 중소기업과 연계
	- 교육기부·퇴직공무원 활용· 해외파견 사업간 연계강화	- 교과, 체험, 예술 등 교육기부를 위한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개발 - '퇴직공무원 종합포털'을 개설, 사회복지, 생활안전 분야 활용 -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에서 청년-시니어간 연계가능 사업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 (일자리 질) 고령자가 제2의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직지원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무직의 직장 알선을 강화

·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 시, 일정 기간 퇴직·전직교육을 의무

- 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지원 전직 지원기관 이용을 활성화
- 퇴직 전문인력 중소기업 재활용기회 확대와 창업지원 및 귀농귀촌 서비스 강화, 50·60 일자리 클럽 지원제도 및 신흥시장과 연계한 해외취업 방안을 통해 사무직 취업알선을 강화
- ⇒ 고용연장과 관련된 임금피크제의 혜택이 어려운 사무직 고령자들을 고려한 정책임

<표 5> '일자리 지원' 정책과제 세부내용

과제 방향	세부 과제	추진 사업
1. 저소득, 취업 애로 계층 틈새일자리 지원강화	- 병원 등 시간제 일자리 기회 확대	- 보건의료, 복지, 유통판매 등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 확산 - 공공도서관 등 주말·야간 서비스 제공 일자리 발굴
	- 취업 애로 구직자 지원 강화	- 상담-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후 취업실패 시 중소기업 현장연수 제공
2. 퇴직 전문 인력 중소기업 재활용 기회 확대	- 중소벤처기업 재취업 활성화	-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 협회 등을 시니어 채용 지원기관 지정- 시니어 채용 전문매니저 도입
	- HRD 자문위원 등 중소기업 멘토 활용	- HRD 종사 퇴직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종합훈련 서비스 제공 - 전문경력 퇴직자를 활용한 맞춤형 경영진단 및 자문 제공
3. 창업지원 및 귀농귀촌 서비스 강화	- 시니어 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시니어 비즈 플라자 운영 - 창업관련 교육 및 수료자에게 시니어 창업 전용 자금 지원
	- 귀농귀촌 지원 강화	- 농촌체험 지원 등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도입 - 3주~3개월 귀농교육 및 농업기반 자금 지원
4. 50·60 일자리 클럽 지원제도 도입		- 50~60대 퇴직인력의 일자리 고민 모임운영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시범사업 운영 및 전국 확대 추진
5. 신흥시장과 연계한 해외취업 방안 강구		- 퇴직 전문 인력의 해외취업 연계 사업 추진 - 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소득 근로자 지원제한 기준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 (인프라 측면) 은퇴 후 소득보장, 모집·채용 상의 연령차별 예외 인정, 보험자격 이중 취득 허용,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 및 연령기준 변경 등 고용 인프라의 재정비 및 강화를 추진
 - 은퇴 후 소득보장과 관련해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고령자와 기업간 원활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집·채용 상의 연령차별 예외 조항 허용을 추진
 - 시간제 및 겸업이 확산됨에 따라 현행 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을 풀어 둘 이상 피보험자격 취득과 부분 실업급여 지급 등도 고려
 - ⇒ 고령자 일자리가 일용직 등 시간제 일자리가 많고, 저임금이라는 측면에서 고령자들이 실직 시, 취약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겠다는 의미
 -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현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54세)'의 명칭 및 연령 기준을 고령사회에 맞게 '장년'으로 변경

4. 정책적 보완과제

- (고용연장) 정년 60세 의무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법적 의무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 정부는 정년제도와 관련해 정년 현황조사를 현 300인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정년 60세 미만 기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
 - 또한 정부 재정지원금과 연계해 임금피크제 등으로 기업의 단계적 정년연장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선과 연계해 정년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일자리 질) 젊은 층 대비 낮은 임금 수준과 비정규직 문제에서의 임시직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
 - 고령자들은 재취업이 어려운데다가 고령화가 이루어질수록 임시직 비중이 많아지는 만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에서 고령자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임금에서도 젊은 층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령자 친화 업종 및 기업을 포함해 업종별·직무별 임금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배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업무 환경) 유해환경에서 근무하는 고령자들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향후 소득 보장 제도로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대안이 필요

- 금번 고령자 고용촉진 계획에서는 '고령층 적합일터 환경조성'이라는 지원과제를 통해 고령자들의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자는 예방차원의 장기적 전략과제만이 제시
- 그러나 2011년 12월 말 산업재해통계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93,292명 중 29.5%인 27,547명이, 그리고 총 사망자 2,114명 중 41.0%인 866명이 55세 이상 근로자로 나타남
- 더불어 산재보험 미가입자 중 소규모 자영업자나 무급종사자,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고령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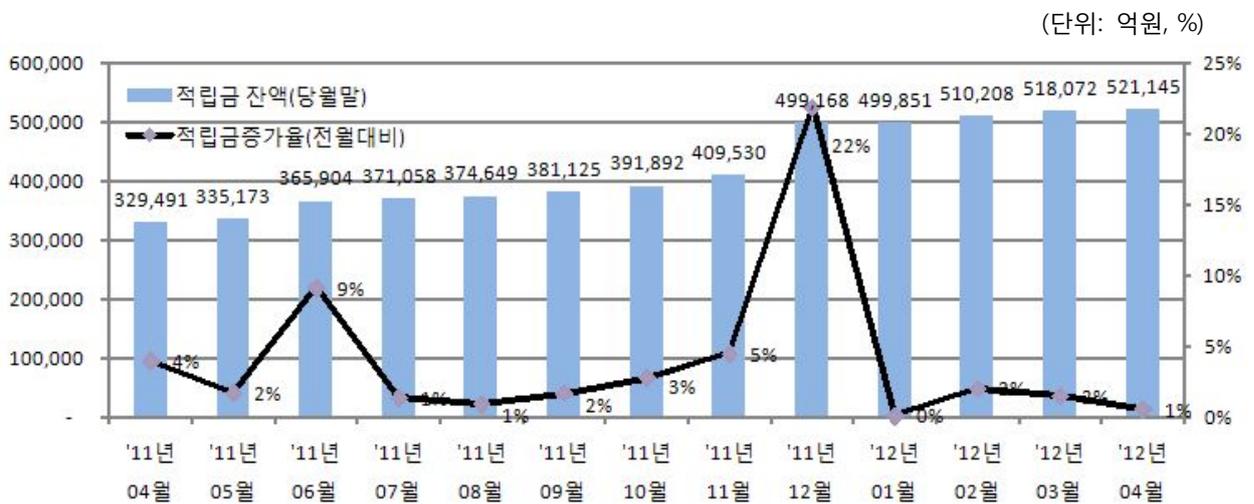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 (02-380-8149,)

□ 퇴직연금통계 (2012년 4월말)

○ 적립금 규모

- 2012년 4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2 조 1,145 억원으로 전월말 (51 조 8,072 억원) 대비 0.6% (3,074 억원) 증가
- 퇴직급여지급액 증가분이 정기납입액 증가분을 초과하였으나, 제도전환 및 적립금 운용수익 등에 따라 소폭 증가
- 퇴직금 추계액(133.6 조 추정)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35.9%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57,268 개소로 전월말(152,910 개소) 대비 2.8% 증가
- 총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0.4%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92,642	41,093	17,139	4,667	738	989	157,268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	7.3	24.6	34.3	45.3	54.1	88.3	10.4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여민동락(與民同樂), 더불어 함께하는 리더십

도올 김용옥 선생이 최근 『맹자, 사람의 길』이라는 책을 두 권으로 만들어 냈다. 이로써 중국의 유학 사상과 문화를 대표하는 四書(논어, 맹자, 대학, 중용) 전부를 도올 선생의 시각으로 풀어서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맹자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자구(字句)는 <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하편에 실려 있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이다. '여민동락'은 『맹자』를 관통하는 철학적 기조인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공동체적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다.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서, 백성들이 믿고 따르며 존경하는 임금이 되려면 마땅히 '여민동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훌륭한 임금은 흔하지 않으며, 오히려 백성과 떨어져서 혼자 즐기는 '이민독락(離民獨樂)'의 임금이 대부분이다. '여민동락'이 아니라 '이민독락'에 빠져 있는 리더십은 소통하지 않는 리더십이다. 독불장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권위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일의 리더십은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이민독락'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반면 '여민동락'의 더불어 함께하는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높은 주인의식과 몰입도를 토대로 높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요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어려운 사정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유럽의 위기가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국내외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여민동락'의 함께 하는 리더십을 통해 어려운 외부 환경과 위기를 돌파해내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주로 사랑받는 세종대왕이야말로 '여민동락'의 리더십을 실천했던 분이다.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고,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해주고, 영토를 넓혔다. '여민동락'의 리더십을 실천함으로써 백성이 행복하고 나라가 튼튼한 태평성대의 시기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나는, 과거 내가 상상한 바로 그 모습이다.”

- 거트 보네거트 2세(1922~2007) : 미국의 수필가, 소설가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